

2016 교행직 9급

행 정 학

해설위원 : 김 만 희 교수

본 문제의 해설 소유권 및 판권은 김만희 교수에게 있습니다. 무단복사 판매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

-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,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-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
[2016년도 교육행정직 9급 해설] - A책형

해설 : 김만희 교수(공단기 행정학 전임)

문	1	2	3	4	5	6	7	8	9	10
답	④	②	②	②	④	②	①	④	③	③
문	11	12	13	14	15	16	17	18	19	20
답	①	①	①	③	④	④	③	②	①	②

문 1.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?

- ① 해치법(Hatch Act)
- ② 직업공무원제 확립
- ③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
- ④ 관료의 정책형성 기능 확대

정답 : ④
 <문제 근거> 마니행정학 2 p. 124
 <분석 해설>

- ④ 관료의 정책형성 또는 정책결정 기능의 확대는 관료로 하여금 정치적 개입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된다.
- ① 해치법(Hatch Act)은 뉴딜정책이 시행되면서 정당의 행정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광범위하고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한 법이다.
- ②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요건 중 하나는 정치적 중립이다.
- ③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이유는 공무원은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불편부당하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.

문 2. 학습조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개방체계와 자아실현적 인간관에 기반한다.
- ② 자극-반응적 학습을 주된 방법으로 활용한다.
- ③ 역량기반 교육훈련제도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.
- ④ 핵심가치는 의사소통과 수평적 협력을 통한 조직의 문제 해결이다.

정답 : ②
 <문제 근거> 마니행정학 1 p. 488
 <분석 해설>

- ② 자극-반응적 학습은 고전적 조직이론에서 말하는 것이다. 학습조직은 자발적 학습과 관련된다.
- ① 학습조직에서는 열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자기개발과 시스템 사고에 입각한 개방체계를 강조한다.
- ③ 학습조직은 역량기반 교육훈련제도의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.
- ④ 학습조직은 수평적 조직구조를 강조하면서 협력적인 문제해결방식을 핵심가치로 한다.

문 3. 하향적 정책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정책집행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.
- ② 집행과정에서 현장을 강조하고 재량권을 부여한다.
- ③ 정책 목표와 수단 간의 타당한 인과관계를 전제로 한다.
- ④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하향적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.

정답 : ②
 <문제 근거> 마니행정학 1 p. 287
 <분석 해설>

- ② 집행과정에서 현장을 강조하고 집행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할 것을 강조하는 접근방법은 상향식 정책집행과 관련된다.
- ① 정책목표를 중시하고 집행결과를 명시된 정책목표의 달성도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객관적인 집행평가를 가능하게 한다.
- ③ 하향적 정책집행에서는 목표-수단의 인과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책집행은 결정된 바를 충실히 이행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게 된다.
- ④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하향적 접근보다 상향적 접근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.

문 4. 정책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<보기>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<보기>

- ㄱ. 신공항 건설은 재분배 정책이다.
- ㄴ. 공공건물 금연은 규제 정책이다.
- ㄷ. 탄소배출권거래제는 분배 정책이다.
- ㄹ. 공무원연금제의 개정은 구성 정책이다.

- ① ㄱ, ㄷ
- ② ㄴ, ㄹ
- ③ ㄴ, ㄷ, ㄹ
- ④ ㄱ, ㄴ, ㄹ

정답 : ②
 <문제 근거> 마니행정학 1 p. 187
 <분석 해설>

- ② ㄴ, ㄹ이 옳다.
- ㄴ. 공공건물 금연은 흡연을 하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제재나 통제를 가하는 규제정책이다.
- ㄷ. 공무원 연금제의 개정은 정치체제에서 투입을 조직화하고 체제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구성정책에 해당한다.
- ㄱ. 신공항 건설은 정부가 특정한 지역사회에 공항이라고 하는 사회간접자본 등의 편익을 배분해주는 배분정책(분배정책: distributive policy)에 해당한다.
- ㄹ. 탄소배출권거래제도도 규제대상이 되는 탄소배출 기업들에게 규제기준을 설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집행까지 위임하는 자율규제정책에 해당한다.(Salisbury)

● 학자별 정책유형 분류 ●

학자	내용
Lowi	분배정책, 규제정책, 재분배정책, 구성정책
Almond & Powell	분배정책, 규제정책, 추출정책, 상징정책
Ripley & Franklin	분배정책, 경쟁적 규제정책, 보호적 규제정책, 재분배정책
Salisbury	분배정책, 규제정책, 자율규제 정책, 재분배정책

문 5. 역대 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노무현 행정부는 예산효율화를 위해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.
- ② 김영삼 행정부는 지방분권화를 위해 내부부의 지방통제기능을 축소하였다.
- ③ 이명박 행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를 위해 민영화, 통폐합등의 조치를 단행하였다.
- ④ 김대중 행정부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였다.

정답 : ④
 <문제 근거> 마니행정학 1 p. 149
 <분석 해설>

- ④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2006년 노무현 정부(참여정부)에서 도입되었다.
- ① 프로그램 예산제도(사업별 예산제도)는 2008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되었다.
- ② 김영삼 정부에서 내부부의 지방통제기능을 축소시킨 바 있다.

③ 이명박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하며 공기업의 민영화, 정부부처의 통폐합등의 조치를 단행하였다.

문 6. 행정학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신행정론은 적실성, 참여, 변화, 가치, 사회적 형평성 등에 기초한 행정의 독자적 주체성을 강조한다.
- ② 뉴거버넌스론은 계층제를 제외하고 시장과 네트워크를 조합한 방식을 활용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한다.
- ③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 및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적 활동을 강조한다.
- ④ 신공공서비스론은 신공공관리론의 오류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두되었으며, 주로 민주적 시민이론, 조직인본주의와 담론이론 등에 기초하고 있다.

정답 : ②
 <문제 근거> 마니행정학 1 p. 29, 138
 <분석 해설>

- ② 뉴거버넌스는 정부(계층제)-시장-시민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에 의한 문제 해결방식을 증시한다.
- ① 신행정론은 행정의 사회적 적실성, 실천적이고 정책지향적인 행정, 행정학의 독자적 주체성등을 강조하며 대두된 이론이다.
- ③ 신공공관리론은 기업경영의 논리와 방식을 행정부문에 도입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활동을 강조한다.
- ④ 신공공서비스론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신공공관리론의 지나친 시장주의와 심스미 고객화등에 대한 대안적 이론으로 제시되었다.

문 7.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는 자치구를 두고 있다.
- ② 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행정구를 둘 수 있다.
- ③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, 그 밖의 지역에는 읍·면을 둔다.
- ④ 보통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.

정답 : ①
 <문제 근거> 마니행정학 2 p.
 <분석 해설>

- ① 우리나라의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 1계층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자치구를 두지 않는다.
- ② 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. (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)
- ③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(도농복합형태의 시)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, 그 밖의 지역에는 읍·면을 두되,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·면·동을 둘 수 있다. (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)
- ④ 보통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. (지방자치법 제2조 제3항)

문 8. 2016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제도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재직기간 상한을 최대 36년까지 인정한다.
- ② 유족연금 지급률을 모든 공무원에게 60%로 한다.
- ③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임용 시기 구분 없이 65세로 한다.
- ④ 연금지급률을 1.9%에서 1.5%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.

정답 : ④
 <문제 근거>
 <분석 해설>
 ④ 2016년 현재 1.87%에서 2025년까지 1.74%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. (공무원연금법 부칙)
 ①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 재직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최대 36년까지 인정한다. (공무원연금법 부칙)
 ② 유족연금의 지급률은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. (공무원연금

법 제57조)
 ③ 65세가 되었을 때 퇴직연금을 지급한다. (공무원연금법 제46조)

문 9. 공무원의 부패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공금횡령, 개인적인 이익의 편취, 회계부정 등은 사기형 부패에 속한다.
- ② 법에 규정하지는 곤란하여 윤리강령에 규정하는 부패의 유형은 회색부패에 속한다.
- ③ 대부분의 부패 행위는 개인 수준에서 발생하는데, 일반적으로 잘 드러나는 부패는 조직 수준의 부패이다.
- ④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이른바 '급행료'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제도화된 부패의 예이다.

정답 : ③
 <문제 근거> 마니행정학 2 p. 132
 <분석 해설>

- ③ 조직 수준의 부패는 보통 외형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.
- ① 공금횡령, 개인적 이익편취, 회계부정은 공무원이 그 직위를 남용하여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부패인 사기형 부패에 해당한다.
- ② 회색부패는 수용과 비난 사이 일치점을 찾기 어려운 부패이기 때문에 법에 규정하기 곤란하고 윤리강령에 규정한다.
- ④ 인허가 업무 관련 급행료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부패가 일상화되고 제도화되어 부패가 실질적 규범이 되어버린 체제화(제도화) 된 부패의 예에 해당한다.

문 10. 예산집행과 관련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예산집행은 재정통제와 재정신축성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.
- ②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.
- ③ 예비비로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야 한다.
- ④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고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정답 : ③
 <문제 근거> 마니행정학 2 p. 218
 <분석 해설>

- ③ 예비비의 사용목적으로 공무원의 보수등 인건비를 정할 수 있으나, 공무원 보수 인상을 위해 예비비를 지정할 수는 없다.
- ① 예산집행은 두 가지 목표를 내포하고 있는데, 재정통제가 주된 목표이고 재정의 신축성 확보는 보완적 목표에 해당한다.
-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. (국가재정법 제46조)
- ④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(年賦額)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. (국가재정법 제23조)

문 11. 다음의 분류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구분	배제성	비배제성
경합성	(가)	(나)
비경합성	(다)	(라)

- ① (가) 재화는 시장에 맡겨 두고 정부가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.
- ② (나) 재화에 대해 정부는 무분별한 사용을 막는 규칙을 설정한다.
- ③ (다) 재화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공급하는 이유는 자연독점에 의한 시장실패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.
- ④ (라) 재화는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해야 한다.

정답 : ①

- 다.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에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모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다.
- 라. 행정서비스 품질에 대한 시민평가제는 신공공관리론의 고객지향적 행정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이다.

문 17.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주민소환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, 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, 교육감이다.
- ② 현행법상 주민참여제도의 도입 순서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청구, 주민투표, 주민소송, 주민소환 순이다.
- ③ 주민투표는 자치단체장에게, 주민감사청구는 감사원에, 주민소송은 관할 행정법원에, 주민소환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한다.
- ④ 주민소송의 소송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 중 공금지출에 관한 사항,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·임차·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등 재무·회계에 관한 사항이다.

정답 : ③

<문제 근거> 마니행정학 2 p. 270

<분석 해설>

- ① 주민소환투표는 선출직 지방공무원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한다. 다만 비례대표 시·도, 시·군·자치구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.
- ② 현행법상 주민참여제도는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(1999) → 주민투표제도(2004) → 주민소송제도(2005) → 주민소환제도(2006) 로 도입되었다.
- ③ 주민감사청구의 경우 특별시·광역시·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,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.
- ④ 주민소송은 납세자소송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,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,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·임차·도급 그 밖의 체결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부당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한 소송이다.

문 18. 우리나라 통합재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제통화기금(IMF)의 재정통계 작성기준을 기초로 작성 및 발표한다.
- ② 금융 공공부문 및 비금융 공공부문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외에 기금과 세입세출의 자금을 포함한다.
- ③ 회계 간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제외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연결재무제표와 유사하다.
- ④ 정부 전체의 재정규모를 파악하고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제도이다.

정답 : ②

<문제 근거> 마니행정학 2 p. 177

<분석 해설>

- ② 통합재정에서는 금융적 성격이 강한 금융성기금이나 외환평형기금은 제외된다.
- ① 우리나라에서 통합재정은 국제통화기금(IMF)의 '정부재정통계편람'에 따라 1979년부터 도입되었다.
- ③ 통합재정은 순수 재정활동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한다.

문 19. 중앙행정기관의 개방형 임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경력개방형 직위제도는 공무원과 민간인이 경쟁하여 최적임자를 선발하는 것이다.
- ②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또는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% 범위에서 지정한다.
- ③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직위를 통해 임용된 경우 공히 임용기간 만료 후 원소속으로 복귀가 가능하다.
- ④ 공모직위제도는 타 부처 공무원들과의 경쟁을 통해 최적임자를 선발하는 제도로 경력직 고위공무원단 직위 수의 30% 범위에서 지정한다.

정답 : ①

<문제 근거> 마니행정학 2 p. 30, 44

<분석 해설>

- ① 경력개방형 직위제도는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이다.
- <관련조문>
"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" 제3조 제3항 :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**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**하는 개방형 직위(이하 "경력개방형 직위"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②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또는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% 범위에서 지정한다. (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)
- ③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로 임용된 경우 임용기간 만료 후 원 소속으로 복귀할 수 있다. (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9조)
- ④ 공모직위제도는 경력직 고위공무원단 직위 수의 30% 범위에서 지정한다. (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)

문 20. 우리나라 성인지(性認知)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이다. <보기>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<보기>

- ㄱ.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히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ㄴ.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, 성과목표,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ㄷ. 정부는 예산과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ㄹ. 국회는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예산안이나 결산서와는 독립적인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.

- ① ㄱ, ㄷ
- ② ㄱ, ㄴ, ㄷ
- ③ ㄴ, ㄷ, ㄹ
- ④ ㄱ, ㄴ, ㄷ, ㄹ

정답 : ②

<문제 근거> 마니행정학 2 p. 180

<분석 해설>

- ② ㄱ, ㄴ, ㄷ이 옳다.
- ㄱ. 현재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모두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어 있다.
- ㄴ.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, 성과목표,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 (국가재정법 제26조 제2항)
- ㄷ. 정부는 예산과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(국가재정법 제26조 제1항)
- ㄹ. 성인지 예·결산서는 본예산 및 결산 심사 절차에 통합해서 심사하여야 한다.